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이영실 의원 외 16명

나. 의안번호 : 제 1424 호

다. 발의일자 : 2020. 4. 3.

라. 회부일자 : 2020. 4. 8.

2. 제안이유

- 독거노인, 저소득자, 장애인,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며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해당 조례상 안전취약계층 대상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,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3. 주요골자

- 가.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2호)
- 나. “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변경함(안 제57조제1항~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된 ‘안전취약계층’ 용어의 정의를 상위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, 제57조의 ‘안전취약계층’에 대한 다양한 표기를 통일시키려는 것으로,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.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
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 안전취약계층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----- -----.</p>

- 현행 조례 제2조제12호는 ‘안전취약계층’을 “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
- 본 개정안은 이를 “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”,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”,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, “13세 미만의 어린이” 등 상위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여기서,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”은 현행 조례의 ‘안전취약계층’ 정의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나 현행 조례 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제1항에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서술하면서 “저소득층”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처럼 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’으로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여겨짐.
-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‘안전취약계층’에 대한 재난 및 각종 사고 대비·대응 등을 위한 시책 마련·시행 시 ‘안전취약계층’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